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665호
2018. 7. 2

정책동향

- 재건축 규제 정책의 파장과 보완 방향
-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제고 방안

시장동향

- 올 국내 건설수주, 14.7% 감소 136.8조원 전망
- 하반기 주택 매매가 0.5% 전세가 1.3% 떨어질 듯

산업정보

- 2017년 OPEC 회원국의 석유 수출액 동향

건설논단

-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되었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재건축 규제 정책의 파장과 보완 방향

-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해 규제 수단의 선별 완화 등 조율 필요 -

■ 각종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시장의 주요 교란 요인으로 지목된 재건축사업 규제에 집중

-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년을 넘기는 동안 약 8차례의 부동산시장 안정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2017년에는 6·19대책(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 방안), 8·2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9·5대책(8·2대책 후속 조치), 10·24대책(가계부채 종합 대책), 11·29대책(주거복지 로드맵), 12·13대책(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의 발표가 있었음.
 - 2018년에 들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함께 2·20대책(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 3·27대책(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 등이 발표됨.
- 특히, 2017년 ‘8·2대책’은 재건축사업에서의 재당첨 제한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확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재건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로 사업 추진 자체를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재건축사업 주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은 2017년의 ‘8·2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입주 때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임.
 - 투기적 성격과 상관없는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까지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투기과열지구에서 10년 이상 소유·5년 이상 거주 1주택자에 예외 인정 등 일부 수정함.
 - 그러나 재건축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해치고, 재건축 투자 유인을 사라지게 만들며, 수요층의 일반분양분 쏠림에 따른 과당 청약경쟁 유발 등의 문제점이 여전함.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 도입되어 2017년까지 두 차례 유예되다가 2018년 1월 2일부터 부활되어 시행되고 있음.

-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실질적 과세와 다름없으며, 은퇴자나 연금 생활자 등 소득이 없는 조합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서 사유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있음.
- 양도소득세와의 중복 과세 효과로 인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란과 함께 재개발 등 다른 도시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 등 위헌 논란도 적지 않음.
-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2017년 ‘8·2대책’에서 언급된 후 후속 ‘9·5대책’에서 구체화되어 11월 7일자로 시행되고 있음.
 - 신규 분양자가 주변 시세 대비 차이만큼 이익을 독식하는 이른바 ‘로또 분양’을 심화시키고, 신규 분양시장 쏠림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업성 하락에 따른 재건축 추진 동력 약화로 도심지 내 주택 공급 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2018년 2월 20일에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음.
 - 기준 강화 과정에서 재건축 대상 단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아울러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와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1988년 이전 준공 아파트의 잠재적 위험 무방비 노출 등이 과제로 남아 있음.

■ 시사점 및 보완 방향

- 재건축에 대한 정부 시각을 감안하면 불균형과 형평성 논란 속에 당분간 재건축사업 추진이 힘들 것으로 보임. 재건축 대상 주택의 소유자 혹은 조합원 사이에 이후 행보를 놓고 표출될 갈등과 이견의 심화도 사업 전망을 어렵게 함.
-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속적 규제로 도심지 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균형 잡힌 도심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길을 터놓아야 함.
- 정부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 및 규제가 부작용만 키웠던 과거의 사례를 교훈 삼아 부동산시장의 자율 기능을 감안한 지역별 또는 규제 수단의 선별 완화 등 보완을 위한 조율에 나서야 할 것임.

두성규(선임연구위원 · skdoo@cerik.re.kr)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제고 방안

- 내용연수에 근거한 관리·운영 기간 결정,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육성 등 -

■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과 관련 쟁점들

- 공공성은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가 또는 사회와 관련되는 현상 또는 일반 사회 구성원에 게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의미¹⁾하며, 개념과 구성 요소는 계속 변화함.²⁾
 - 공공성은 행위의 목적, 공공 서비스 제공 과정, 공공 자원의 사용 등에서 다음과 같은 속성 등을 만족시킬 경우 확보될 수 있음.³⁾
 - 행위의 목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통합 달성, 공공 서비스 수혜 범위의 포괄성과 형평성 실현, 적절한 서비스 내용 구성, 절차 준수 및 적절한 규제를 지향해야 함.
 - 공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공적 가치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뢰성과 형평성뿐 아니라 반응성, 개방성, 공정성, 공평성 등이 실현되어야 함.
 - 자원의 사용 측면에서는 재정적 책임성 등이 실현되어야 함.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쟁점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동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차별 요금 부과 : 공공 서비스의 사회적 통합 달성 목적, 수혜 범위의 포괄성과 형평성, 서비스 제공 과정의 공평성 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정보 비대칭 : 공공 서비스의 신뢰 형성, 반응성과 개방성 제공이 하락할 수 있음.
 - 제한된 사업 참여 기회와 편중된 지배구조 : 공공 서비스의 사회적 통합 달성 목적, 보편성과 평형성, 반응성과 개방성 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 수요 변동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와 파산 가능성 : 공공 서비스의 신뢰 형성과 재정적 책임성 등이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단기 개선 방안

- 직접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물리적인 시설물 내용연수에 근

1)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2) 백완기(2007); Moulton(2009); Pesch(2008).

3) 공공성의 정의 및 구성 요소 등은 학제 간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 ‘다차원적 접근론’에 근거한 양성욱, 노현희(2012)의 논문에 기반하여 기술함.

거하여 관리·운영 기간을 결정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민간투자 시설물의 실질적 내용연수는 50년을 초과하는 데 비하여, 운영 계약 기간은 BTL의 경우 통상 20년, BTO의 경우 통상 30년 내외임.
- 실질적인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계약 기간을 더 길게 적용할 경우, 민간투자자가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요금을 더 낮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사용자가 내는 요금에 대하여 부가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용 요금의 10%를 인하시킬 수 있음.⁴⁾

-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50년 이상으로 운영 기간을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최근 실시된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 구간) 재구조화 사례는 운영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사용자 요금을 재정사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프랑스의 PPP제도는 시설물의 내용연수에 근거해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 99년까지 계약 기간을 허용하고 있음.
- 2016년 12월에 개통된 미국 버지니아주 엘리자베스 리버크로싱 (해저)터널은 개통 후 58년의 기간으로 운영 계약이 체결됨.
-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는 운영 기간 연장(20년) 등으로 4,800원(재정 요금 대비 1.7배) 이던 통행료를 3,200원(재정 요금 대비 1.1배)까지 인하함. 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재정 요금 수준까지 사용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장기적 제도 개선과 추진 과제

- 제한된 사업 참여 기회와 편중된 지배구조, 사업에 대한 투명성 증대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이 시설물 이용자인 동시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의 인프라펀드’ 육성이 필요함.⁵⁾
-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Shadow-toll’ 방식⁶⁾의 요금 징수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민간투자사업의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시적 성과와 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도 있음.

박수진(연구위원 · jin@cerik.re.kr)

4) 이 의사결정은 사용자 요금 인하로 인한 사회적 효용 증가와 정부의 부가세 수입 감소 중 어느 쪽이 사회 전체적으로 유리할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구체적인 사회적 효용들은 민간투자시설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 서비스의 포괄성과 형평성, 공정성 개선, 그리고 사회적 통합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음.

5) ‘외국의 상장 인프라펀드 현황과 정책 시사점’, 건설동향브리핑 645호 및 646호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6) 요금에 대한 징수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수요량에 비례해 사전에 협약된 금액을 정부가 민간투자자에게 지불하는 방식.

올 국내 건설수주, 14.7% 감소한 136.8조원 전망

- 민간 주택 수주 감소와 정부 SOC 예산 감소가 주된 요인 -

■ 공공 수주 14.3% 감소, 민간 수주 14.9% 감소할 듯

- 2018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4.7% 감소한 136.8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7년 하반기 이후 3분기 연속 전년 대비 10% 이상 수주가 감소할 전망이다.
 - 결국 2015년 이후 3년 동안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인 수주액이 2018년에는 136.8조원을 기록해 2014년(107.5조원) 이후 4년래 최저치로 하락함으로써 3년 호황이 종료될 전망이다.
 - 건설수주가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민간 주택 수주가 주택경기 하락의 영향으로 급감하는 가운데, 공공 수주가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 SOC 예산 급감 등의 영향으로 동반 하락하기 때문이다.
- 발주부문별로 공공 수주는 SOC 예산 급감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3% 감소한 40.5조원을 기록해 4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표 1> 2018년 국내 건설수주 전망

구분	2015	2016			2017			2018(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수주액(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44.7	18.7	28.7	47.4	22.0	25.2	47.3	16.9	23.6	40.5
민간	113.3	50.3	67.1	117.5	56.7	56.5	113.1	50.8	45.5	96.3
토목	45.5	16.3	21.9	38.2	23.3	18.9	42.2	19.3	19.8	39.1
건축	112.5	52.8	73.9	126.7	55.4	62.8	118.2	48.4	49.3	97.7
주거	67.7	31.1	44.9	75.9	31.7	37.0	68.8	24.6	26.8	51.4
비주거	44.8	21.7	29.0	50.7	23.7	25.8	49.5	23.8	22.5	46.3
계	158.0	69.0	95.8	164.9	78.7	81.7	160.4	67.7	69.1	136.8
증감률(% 전년 동기비)										
공공	9.8	-20.2	34.8	6.0	17.7	-12.1	-0.3	-23.1	-6.6	-14.3
민간	69.7	-0.3	6.9	3.7	12.6	-15.9	-3.7	-10.4	-19.4	-14.9
토목	39.0	-26.1	-6.6	-16.0	43.2	-13.9	10.4	-17.3	5.1	-7.3
건축	50.5	1.7	22.0	12.6	5.0	-15.0	-6.7	-12.6	-21.6	-17.4
주거	64.7	1.2	21.3	12.2	2.2	-17.5	-9.4	-22.5	-27.7	-25.3
비주거	33.2	2.3	23.1	13.2	8.9	-11.0	-2.5	0.8	-12.9	-6.3
계	47.0	-6.6	14.0	4.4	14.0	-14.7	-2.7	-14.0	-15.4	-14.7

주 : 2018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민간 수주는 주택 수주를 중심으로 건축 수주가 부진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9% 급감한 96.3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며, 역시 2014년 이후 4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부진할 전망이다.

■ 2018년 건설투자 전년 대비 0.2% 감소, 하반기에는 1.3% 감소 전망

- 2018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0.2% 감소해 2012년(-3.9%)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의 감소세가 향후 2~3년 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2018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를 보일 건설투자는 2019년 이후에도 당분간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순환 국면으로는 2018년 하반기 이후 불황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할 전망이다.

<표 2> 2018년 건설투자 전망

(단위 : 조원,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2015	2016		2017			2018(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211.54	106.24	127.13	233.37	116.55	134.53	251.08	117.78	132.84	250.62
증감률	6.6	9.0	11.4	10.3	9.7	5.8	7.6	1.1	-1.3	-0.2

주 : 2018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이며, 건설투자액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 ; 자료 : 한국은행

■ 전망의 시사점

-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14.7% 급감하고,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도 2017년 7.6% 증가에서 2018년에 0.2% 감소해 건설경기 하락세가 매우 빠름. 이러한 건설경기의 빠른 하락세는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부진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
- 2015년 3/4분기(1.2%p) 이후 2017년 3/4분기까지 9분기 연속 1%p 이상의 GDP 성장 기여도를 기록한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2017년 4/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1%p 미만으로 하락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15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 기여도 예상
-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3%(1.7조원) 감소하는 것은 취업자 수를 약 2.4만명 감소시키고, 하반기 경제 성장률(GDP 증가율)을 0.21%p 하락시킬 것으로 추정됨.
- 향후 건설경기의 경착륙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클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 SOC 예산의 적정 수준 유지, 부동산 대책 수위 조절, 민자사업 활성화, 지방선거 공약 사업의 조기 추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박철한(부연구위원 · igata99@cerik.re.kr)

하반기 주택 매매가 0.5%·전세가 1.3% 떨어질 듯

- 준공 증가 및 수요 위축으로 분양 물량도 전년 대비 10% 감소 예상 -

■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의 주요 변수는 ① 거시경제, ② 시장별 수급 상황, ③ 정책

- 거시경제의 부진, 주택 공급의 증가, 수요관리 정책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만연한 가운데 하반기 주택경기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짙음.
 - (거시경제) 시장금리의 상승 영향으로 수요의 위축이 우려되며 상반기 부진한 모습을 보인 고용 여건과 낮은 물가가 현재 부정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다만, 가계 및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여전함.
 - (수급)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일정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나 외곽 지역의 대량 입주 물량이 점차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정 지방은 지역경기 악화가 동반되면서 시장에 하방 압박이 큼. 접경지역 등 특정 지역과 상품이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시장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제한적임.
 - (정책)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금융·재건축 등 시장 규제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며 수요 억제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수도권·비수도권 간 온도 차 크고, 지방 중심의 하락세 예상

- 매매가의 향방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온도 차이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됨. 수도권 내 핵심 시장과 주변 지역 간의 차이가 커지고, 비수도권의 하락세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시기) 상반기 0.5% 상승과 반대로 하반기 0.5% 가량 하락하여 연간 0.1%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하락세는 올해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임.
 - (수도권) 서울을 위시한 코어마켓은 도심 집중이라는 중장기적 토지 이용 경향이 지속되며 조정 폭이 제한적이겠으나, 인천과 경기 외곽 지역의 경우 준공 물량이 증가하여 수도권은 0.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 지방의 경우 이미 상반기부터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하반기 역시 이러한 추세가 연장되어 하반기에만 0.8%, 연간 1.3%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분양) 청약 경쟁률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특정 단지에서는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제외 기타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초기 계약률이 하락하는 등 악재가 겹쳐 하반기 물량 조정이 불가피할 것임.

- 주택 수요를 견인했던 저금리 기조가 종식되고, 준공 물량이 증가하는 등 리스크가 현실화 되면서 전세가격은 하반기 1.3%, 연간 2.2% 하락할 것으로 보임.
- 준공 물량의 증가로 임차인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전세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어 연간 2.2%, 하반기 1.3%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2004년(3.3% 하락) 이후 최대치에 해당

<2018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단위 : 전기 말 대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a)}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매매	전국	3.5	0.7	0.5	0.9	1.5	0.5	-0.5	-0.1
	수도권	4.4	1.3	0.8	1.5	2.4	1.4	-0.2	1.2
	지방	2.7	0.2	0.3	0.4	0.7	-0.5	-0.8	-1.3
전세(전국)		4.8	1.3	0.4	0.3	0.6	-0.9	-1.3	-2.2

주 :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였음. 2018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 공급부문의 경우 인허가 56만호, 분양 28만호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0% 상회 감소 전망
- (인허가) 공공부문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본격 추진으로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분양주택의 인허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민간부문은 경기 후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클 것임.
- (분양) 5월까지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연말까지 상승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2019년 시장 상황이 부정적인 만큼 분양 시기 조정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주택경기의 하강국면 전환 재걸음, 시장 상황에 걸맞은 정책 노력과 사업 전략 수립 필요

- 상반기까지의 움직임을 볼 때 주택경기가 빠르게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2019년까지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 관점의 대응이 필수적임.
- 주택 공급시장 규모의 축소와 함께 원가 부담 증가·분양가 통제 등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여 사업자는 철저한 원가관리를 수행해야 할 것임.
- 안정적인 공공·민간 win-win 모델 개발을 통해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어려워지고 있는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총 사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적으로는, 경기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김성환(부연구위원 · shkim@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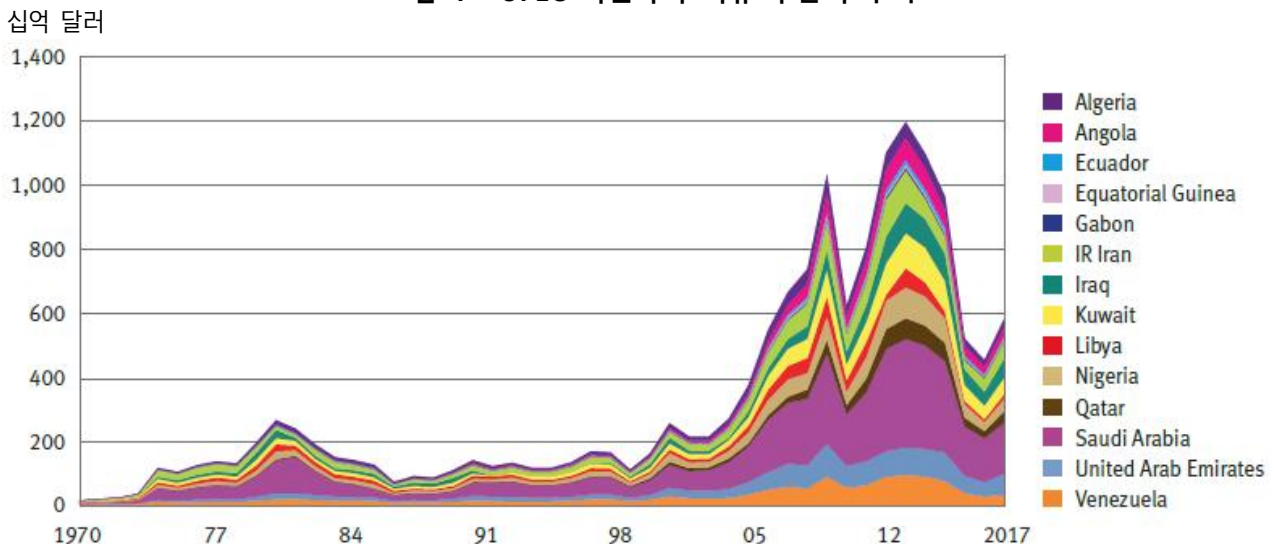
2017년 OPEC 회원국의 석유 수출액 동향

- 유가 상승으로 2016년 대비 약 1,270억 달러 증가한 5,783억 달러 기록 -

■ OPEC 회원국의 2017년 석유 수출 총액은 5,7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9% 증가

-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출액을 기록했던 2016년과 달리 OPEC의 2017년 석유 수출액 규모는 2015년(5,198억 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회복됨.
- 하지만 OPEC 회원국의 2017년 일평균 석유 수출 규모는 2,486만 배럴로 2016년과 비교해 일일 40.6만 배럴이 감소했음.
- 2015년과 2016년의 석유 수출액 급락은 낮은 국제 유가와 회원국의 석유 수출 규모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음. 2017년에 석유 수출 규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증가한 원인은 배럴당 평균 10달러 이상 상승한 국제 유가에서 찾을 수 있음.
- 2017년 OPEC 회원국의 원유 바스켓 가격(reference basket price)은 배럴당 52.43달러로 2016년(40.76달러/배럴) 대비 28.6% (11.67달러) 상승했음.

<그림 1> OPEC 회원국의 석유 수출액 추이



자료 : OP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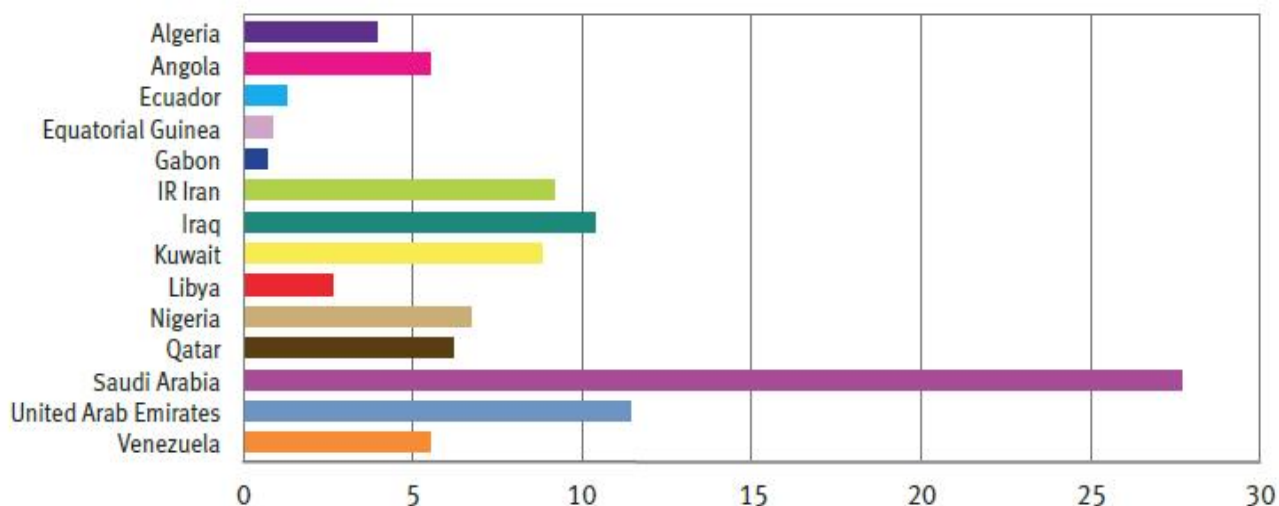
- 비록 2017년에 OPEC 회원국의 석유 수출액이 증가세로 반전했지만 9,642억 달러를 기록했던 2014년과 비교하면 60% 수준이며, 연평균 100달러 이상의 유가를 기록했던 2013년과 비교해서는 절반(52%) 수준임.

■ 전체 수출액 중 국가별 비중은 사우디 27.6%, UAE 11.4%, 이라크 10.3% 순

- 1996년 이후 OPEC 전체 수출액에서 29~34%를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은 2017년에도 지속되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액 규모는 1,5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하였으며, UAE와 이라크는 각각 전년 대비 30.6%, 26.9% 증가해 656억 달러와 597억 달러를 기록함.
- 경제 제재로 인해 2012~2015년 사이 석유 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이란의 경우,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전년 대비 22% 증가한 527억 달러를 기록함.
-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등 3개국과 이란(9.1%), 쿠웨이트(8.8%)를 포함하는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2%임.

<그림 2> 2017년 OPEC 회원 국가의 점유율 현황

(단위 : %)



자료 : OPEC

■ 국제 유가, 하방 압력보다 상승 압력이 더 높은 상황 지속될 듯

- OPEC의 석유 수출액 증가가 생산량 확대에 따른 수출 규모의 증가가 아닌 전년 대비 상승한 국제 유가 때문임을 감안할 때 향후 국제 유가의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경기 회복, OPEC 및 러시아의 감산 연장 합의, 이란 등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의 확대 등은 국제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국제 유가의 안정적인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중동 등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국내 건설기업의 수주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음.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되었나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3년 내에 최대 법정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무려 16시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주당 기준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하는 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7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이번 근로시간 단축 조치는 너무 급박하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준비가 충분한지를 묻고 싶다. 시행 시기가 임박했어도 쟁점이 되고 있는 많은 사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공사비 상승분을 보전하는 과제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건설산업은 수주 산업이다. 수주 시점에서 계약을 통해 사실상 수익 구조가 확정되는데, 시설물의 완성이전에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닌 변동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변경을 통한 공사비 보전이 필요하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최근 건설연에서는 37개 공사현장의 원가계산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상승효과를 분석해보았다.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직접노무비는 평균 8.9%,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총공사비는 평균 4.3%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영상태가 열악한 건설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임금을 계속 유지할 것 같지 않다. 일부 신규 인력의 충원이 있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능인력보다는 상대적으로 관리직의 근로시간이 더 길다. 만약 기존 임금을 유지한 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면, 기능인력보다 관리직 임금이 더 늘어날 것이다. 현장관리자가 많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중소 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현장관리자의 추가 고용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중소 업체의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기계화 시공 물량이 많은 토목공사에 비해 인력 투입이 많은 건축공사는 공사비 상승분이 더 클 수 있다. 대부분 EPC 턴키방식으로 수행되는 해외 플랜트 공사나 단기간에 돌관작업을 통해 준공해야 하는 반도체공장 등 첨단시설 공사에도 엄격하게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다면 공사비는 더욱 크게 상승할 것이다.

7월 이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기와 공사비 산정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공이건 민간이건 간에 기존 공사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기존의 공공공사에 한해서라도 굳이 7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국가계약법령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항목을 마련하여 공사비 상승분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국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해외공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최저 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공정적인 효과가 90%’라는 정부 주장에 대하여 국책 연구기관인 KDI조차 향후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도 철저한 보완책을 준비해 가면서 속도 조절과 함께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건설현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 <건설경제, 2018.6.11>

이상호(원장 · shlee@cerik.re.kr)